

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도 일시 | 2022. 10. 6.(목) 14:00 | | |
| 담당 부서 | 정부혁신조직실 조직기획과 | 책임자 | 과 장 심영재 (044-205-2301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김재욱 (044-205-2302) |

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

- ☐ 정부는 10월 6일(목) 14시, 고위당정협의(10월3일) 및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음.
- ☐ 이번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.
- ☐ (첨부) 정부조직 개편방안

정부조직 개편방안

2022. 10. 6.



행정안전부

차 례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I. 개편 방향 | 1 |
| II. 세부 개편방안 | 2 |
| 1. 여가부 기능 복지부 이관 및 본부 신설 | 2 |
| 2. 국가보훈처 부 단위 격상 | 3 |
| 3. 재외동포청 신설 | 4 |
| III. 개편 후 모습 | 5 |
| ※ 참 고 : 정부조직 현황 | 6 |

I. 개편 방향

□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체계 정립

- 아동·청소년·노인 등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 정책 추진체계 정립
- 새로운 갈등으로 심화되는 젠더갈등을 해소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정비

□ 글로벌 리더로서의 국격에 걸맞는 정부 기능 수행체계 정비

-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국격에 걸맞는 선진 보훈체계 구축
- 높아진 국가적 위상에 부합하도록 그간 소외된 동포사회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·제도 강화

II. 세부 개편방안

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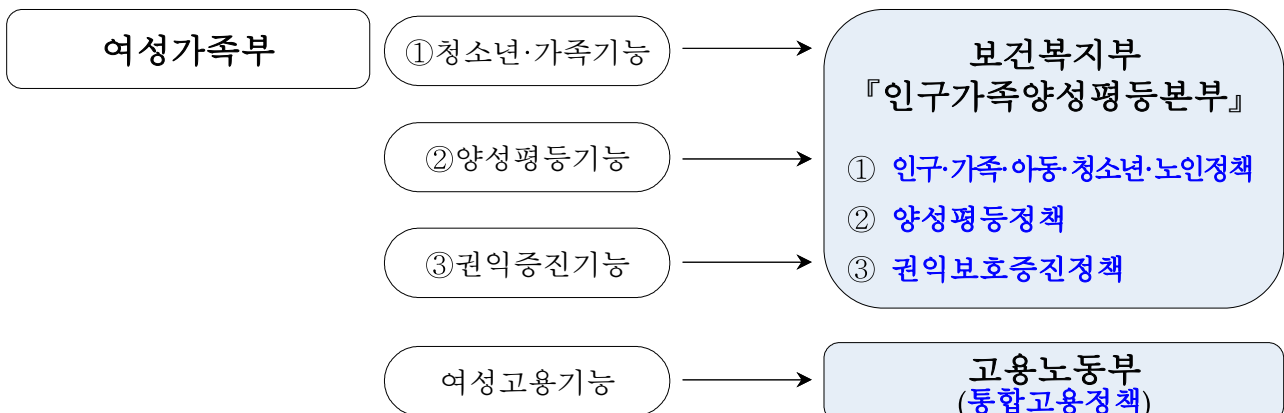
여성가족부 기능 보건복지부 이관 및 본부 신설

□ 개편 필요성

- 여성·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 곤란, 부처 간 기능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 초래
 - * 「복지부」 아동보육노인 ↔ 「여가부」 청소년·가족 / 「고용부」 여성고용 ↔ 「여가부」 경력단절여성지원 등
- 환경변화에 따라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,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의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 필요

□ 개편 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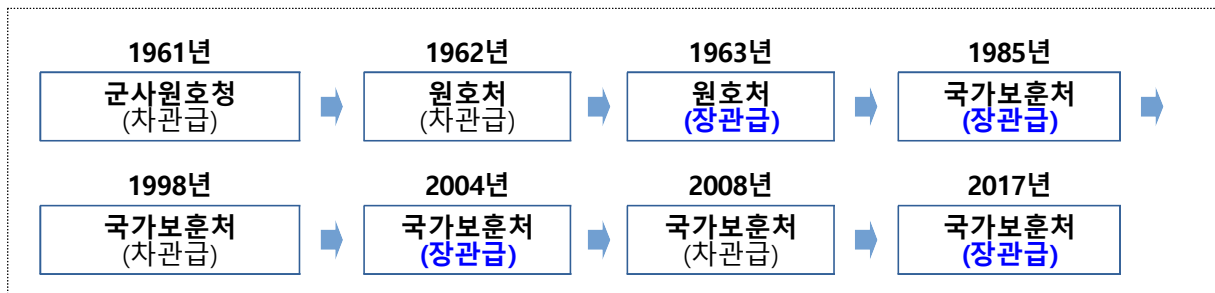
-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‘청소년·가족’, ‘양성평등’, ‘권익증진’ 기능은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에서 『보건복지부』로 이관
 - 인구·가족·아동·청소년·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,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하는 ‘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*’ 신설
 - *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 및 예우 부여
 - ※ 저출산·고령화 극복을 위한 전략체계 정립 및 총리 소속 “양성평등위원회” 활성화
- ‘여성고용’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『고용노동부』로 이관



□ 개편 필요성

- 국가보훈은 대한민국 핵심가치인 ‘자유주의’ 구현의 초석으로서,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여 국민통합을 이끌어갈 백년대계

< 보훈 전담 부처 위상 변화 >



※ 미국, 호주,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'재향군인부' 설치

-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국격에 걸맞는 보훈체계 구축 및 일류보훈 달성을 위하여 국가보훈 조직·기능 강화 필요

□ 개편 방안

- 종합적·체계적 보훈정책 추진 및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 강화를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『국가보훈부』로 격상

-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(헌법 제82조), 독자적 부령권(헌법 제95조), 국무회의 및 관계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 강화

※ (처장) 국무회의 배석·발언권(심의·의결권 없음), 총리령(부령 발령권 없음)

- '부 단위' 부처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, 관련 정책 수행을 위한 조직 및 기능 보강

□ 개편 필요성

- 재외동포 규모가 732만명('21년 기준)에 달하는 상황에서,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,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·체계적 대응 필요

※ 재외동포 : ('17) 743만명 → ('19) 749만명 → ('21) 732만명

- 현재 재외동포 업무를 관계 부처·재단 등에서 분산 수행 중으로, 재외동포 원스톱지원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 필요

□ 개편 방안

-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 이관 및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하여,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『재외동포청』 신설
 -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 강화,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·법무·병무 등 원스톱민원 서비스 제공
 - 재외동포·단체 교류 협력,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, 문화홍보사업 등 기능 수행

※ 재외동포재단(기타공공기관) 기능을 재외동포청으로 이관 및 통합

- '재외동포정책위원회'를 통한 중장기 정책방향성 정립,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*

* 외교부 소속으로 '재외동포정책위원회' 설치·운영 (재외동포기본법령 제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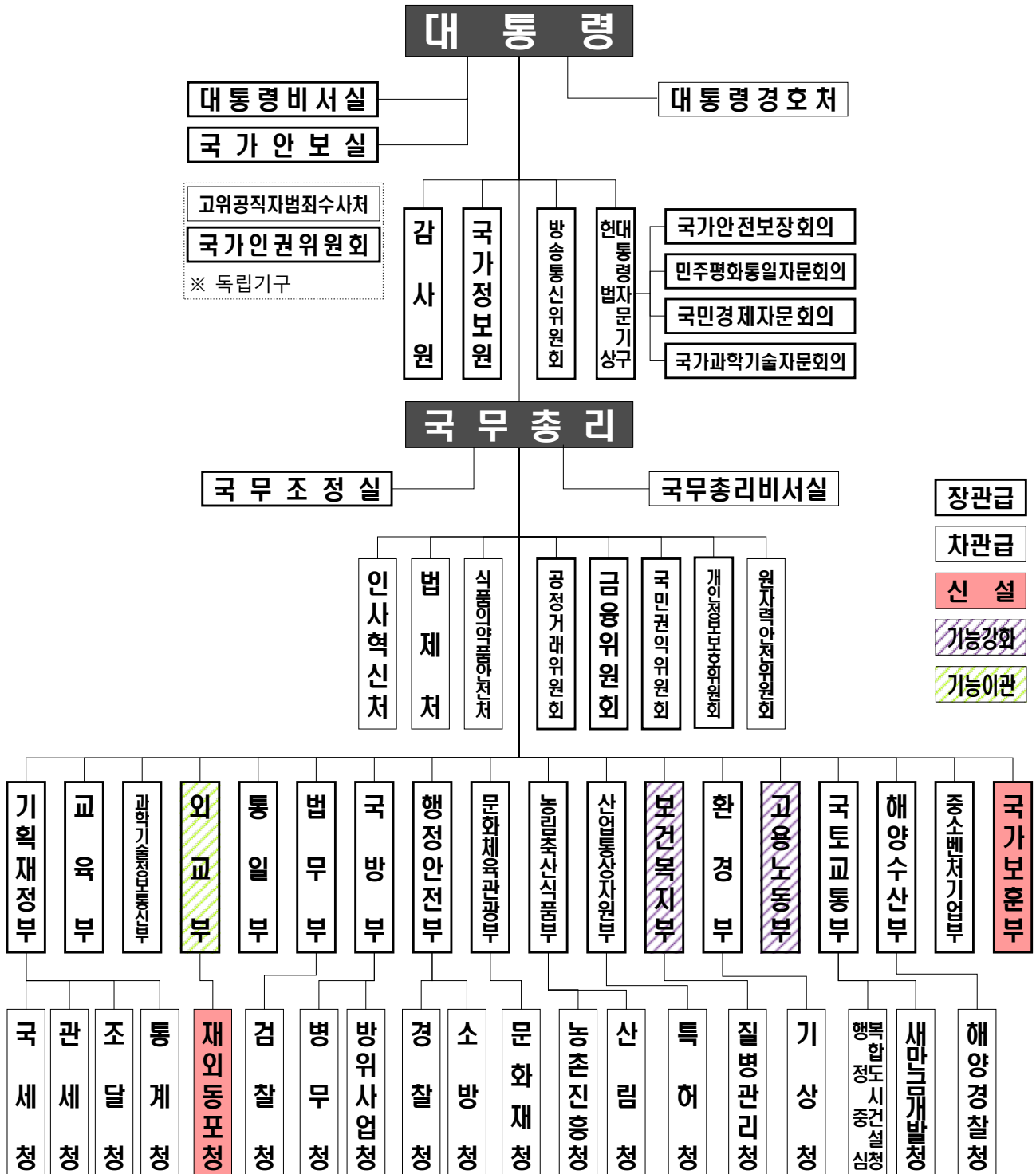
Ⅲ. 개편 후 모습

✓ 여성가족부 폐지, 국가보훈부 신설 / 재외동포청 신설

* 18부·4처·18청·6위원회(46개) ⇒ 18부·3처·19청·6위원회(46개, △1처·+1청)

※ 국무위원 수 : 18명 유지(여성가족부 △1, 국가보훈부 +1)

※ 정무직 수 : 변동 없음(장관급 △1, 차관급 +1)



참고

정부조직개편 개요

